



9월 7일(목) 15:30(현안조정회의 종료) 이후 사용

비고

브리핑 : 9.6(수) 15:30, 정부서울청사, 규제조정실장

담당

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

과장 정용욱, 사무관 김정아
(044-200-2396, 2397)

새 정부 규제개혁,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본격 추진

- ▶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(원칙 허용-예외금지)를 확대,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(사전허용-사후규제)로 전환
- ▶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문제해결 시까지 현장애로 해소
- ▶ 중소기업·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 및 5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 집중 해소
- ▶ 생명·안전·환경 관련 국민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7일(목) 오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이하 '현안조정회의')를 주재하고, 「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」을 심의·확정했다.
- 정부는 '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'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,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.
 - 이를 위해 △신산업·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, △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, △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먼저 신산업·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,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(포괄적 네거티브 규제)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.
 - 신산업·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,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-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 하였으나,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(원칙허용-예외금지)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.
- 이에 정부는 신산업·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-사후규제 방식의 '포괄적 네거티브 규제'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, 이는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.
 - ① 우선 신산업·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·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.
 - 예를 들면, 주요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·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*로 전환하고,
 - * (예)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 가능
 - 신산업·신기술 제품·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*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.
 - * (예)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~L6로 분류하고,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
 - ②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써 규제 샌드박스*가 도입된다.

* 규제샌드박스(Regulatory Sandbox):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 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(탄력적용) 신사업을 테스트(시범사업) 하도록 하는 것,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
- 이에 따라, 혁신적인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·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(면제·유예·완화)하되,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·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

- 또한, 신산업·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·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·드론·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, '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.

□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예정이다.

-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, 현장의 제반 규제 애로를 조정·해결하며,
 - 특히,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·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하여 해결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·발굴해 나갈 계획이다.
-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·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,
-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
□ 또한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-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, (한시적)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하여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하고,
-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관련 5대 분야*를 선정하여 중점 개선한다.

* △보건·복지 △주거·건설 △도로·교통 △교육·보육 △문화·체육

- 아울러 생명·안전 등 관련규제의 폐지·완화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- 이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을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*할 계획이며,
 - * 행안부의 ‘국가사무 지방이양’(’18년~) 및 법제처의 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’(’17.7월~)와 연계하여 추진
-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낼 예정이다.
- 이 외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, 제척·회피 제도 철저 적용,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-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, 특히 국무총리 주재 ‘현안조정회의’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·해소할 계획이다.
-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‘일자리위원회’ 및 ‘4차산업혁명위원회’ 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.
-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‘행정규제기본법’ 개정을 추진하고, 제·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며,
 - 아울러, 금년 부처별 ‘규제정비계획’을 9월중 보완하고 ‘18년부터 연도별 ‘규제정비종합계획’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붙임: ‘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’

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

2017. 9. 7.

순서

1. 추진배경	1
2. 규제개혁 추진방향	1
3. 규제개혁 추진과제	3
① 미래 新산업 지원		
② 일자리 창출 지원		
③ 민생부담 해소		
④ 국민편익 증진		
4. 향후 추진계획	6

1. 추진배경

- '98년부터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
- 그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,
 - 소상공인·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에 상대적 소홀, 국민의 생명·안전 등 보호 강화 필요 지적도 지속 제기
 - 아울러,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소극 행태 잔존 등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미흡

2. 규제개혁 추진방향

- (추진목표)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,
 - △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'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'
 - △ 일자리 창출, 민생부담 해소 등 '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'
- 추진전략
 - ① '新산업·新기술 분야'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
 - 기존 규제방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,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'사전허용-사후규제' 방식 전환 추진
 - 新산업의 발전양상을 예측,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
 - ② '일자리 창출'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
 -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애로 해소
 - 서비스 산업, 경쟁제한적 규제 등 일자리관련 규제는 적극 혁파
 - ③ '민생불편과 부담'을 야기하는 규제 적극 해소
 - 국민생활 불편 해소, 소상공인·중소기업 부담 경감,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
 - 생명·안전·환경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

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

추진
목표

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
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

추진
전략

- ◇ 新산업·新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
- ◇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
- ◇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

추진
과제

미래 新산업 지원	일자리 창출 지원	민생부담 해소	국민편익 증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◇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◇ 창업·벤처기업 규제 혁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 ◇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◇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소상공인·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 ◇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·해소 ◇ 지방발전·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생명·안전·환경 규제 관리 강화 ◇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◇ 규제 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

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·민주성 강화

3. 규제개혁 추진과제

1 미래 新산업 지원

①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

- 빠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 확보 필요
→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(원칙허용-예외금지) 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(사전허용-사후규제) 전환 추진
- (입법방식 전환) 법령개정 없이도 신제품·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
△ 법령의 한정적·열거적 개념 정의 → 포괄적 개념 정의
△ 제품·서비스 관련, 경직된 분류체계 → 유연한 분류체계
- (혁신제도 도입)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, 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
→ '규제 샌드박스' 도입
△ 혁신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·임시허가제 도입
△ 필요시 규제를 탄력적용(면제·유예·완화)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규제샌드박스(Regulatory Sandbox):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(탄력적용) 신사업을 테스트(시범사업) 하도록 하는 것,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

②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

- 신산업·신기술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 발굴·정비 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
- 우선, 자율주행차·드론·맞춤형 헬스케어 대상으로 추진하되, '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마련 추진

③ 창업·벤처기업 규제 혁파

-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선별 등을 위해 '벤처기업 확인제도' 개편
-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진입규제 개선 및 벤처기업 M&A 활성화 규제개선, 중소기업 기술보호 규제 개선 추진

② 일자리 창출 지원

①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

-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, 현장 규제애로 발굴·해소
→ 소규모 프로젝트 일지라도 중소·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요구 사항은 우선 해결
-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자리 관련 규제정비사항 발굴·해소

②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

-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·공유경제 등 **신유형 서비스 활성화**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·해소('18년)
- 관광, 교육, 금융, 콘텐츠, S/W, 물류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

③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-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**4개 분야 규제 집중 개선**('17~'18년)
 - △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·생필품·레저분야, △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, △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, △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

③ 민생부담 해소

① 소상공인·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

-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 적용·(한시적)규제면제 (생명·안전규제 제외) 등 **규제 차등화** 추진 → '행정규제기본법' 개정
 - 규제심사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규제 차등화 검토

②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·해소

- 국민생활 불편이 큰 **5대 분야*** 중점 개선
 - * △보건·복지('17년下) △주거·건설 △도로·교통 △교육·보육 △문화·체육
- 이외에도 그동안의 **규제민원**을 분석, 기획과제로 선정·추진

③ 지방발전·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

- (지역발전) '도시재생뉴딜사업' 지원 등을 위한 '舊도심·舊산단 등 낙후지역 재생' 관련 규제법령 우선 정비(17년下), 지역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분야 집중 정비(18년~)
- (지방이양) 지자체 건의과제(최근 3년간 1만여건) 분석*을 통해 핵심 규제권한 이양, 국가법령 전수검토**를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법령 대폭 정비
 - * 행안부, '국가사무 지방이양'(18년~)과 연계
 - ** 법제처, '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'(17.7월~)와 연계
- (자치법규 정비)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추진,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(~18년)

4 국민편익 증진

① 생명·안전·환경 규제 관리 강화

- 생명·안전·환경 관련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폐지·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 → '행정규제기본법' 개정
 - *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전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하여 실효성 확보
- 규제영향분석 시 직접적 규제비용 외에도 사회적 비용·편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 개발(17년 下) 및 매뉴얼 개정(18년~)

②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

- 국민과 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행정조사(26개 부처 690건)에 대해 금년 중 △ 전수 실태점검 실시 △ 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 → 불필요한 자료제출 폐지·간소화, 조사 주기·횟수 축소, 부처간 공동조사 확대 등
- 중소기업 부담이 높은 업종·조사유형은 추가 정비방안 마련

③ 규제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

- 규제신문고* 제도를 개편, 기존 '의견 제출' 권한을 '청구권'으로 확대하고, 3단계 검토절차의 법적근거 마련 → '행정규제기본법' 개정
 - * 총리훈령에 근거한 온라인 기반 국민대상 규제건의 처리시스템(14.3월), 민생관련 건의가 70% 이상, 3단계 검토 절차(부처답변→소명→개선권고)
- 국민의 규제개선 제안 접수·처리 창구를 규제신문고로 단계적 통합
 - * 중앙부처('17년)→광역단체('18년)→기초단체('19년)
- 규제조문 중앙-지방 연계 정보 제공(18년)
 - * (현행) 4단 정보(법률-시행령-시행규칙-행정규칙) → (개선) 5단 정보(조례·규칙 추가)

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·민주성 강화

- 중소기업·여성·환경·소비자 등 분야별 위원 구성 다양화
- 위원회 회의록 상세 공개, 규제심사 시 제척·회피 제도 철저 적용, 위원 윤리규정 강화

4. 향후 추진계획

- (추진체계) 국무총리 주재 '현안조정회의'에서 주요안건 논의
 -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제, 국정과제 관련 복합과제, 다부처 관련 규제 등 중심으로 이견 조정·해소
- (법령 및 계획) 법령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'행정규제기본법' 개정(안) 마련, 국회 제출('17년)
 - 제·개정이 필요한 부처 소관법령 신속 정비 독려 및 '17년 부처별 '규제정비계획' 보완(9월)